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 일시: 2005년 5월 9일(월) 오후2~5시
- 장소: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
- 주최: 최재천의원실
- 주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 후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NSL1031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 일시: 2005년 5월 9일(월) 오후2~5시 • 장소: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
- 주최: 최재천의원실
- 주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 후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청문회 순서

：

사회 : 백승현 변호사

- 14:00~14:10 개 회 및 인사말
- 14:10~14:20 축 사
- 14:20~14:30 참석자 및 대상사건 소개
- 14:30~15:30 <모내기> 청문회
진술인 성완경 교수에 대한 질의 (최재천 청문관)
참고인 김정환 시인에 대한 질의 (송호창 청문관)
- 15:30~15:40 휴식
- 15:40~16:40 <한국사회의 이해> 청문회
진술인 장상환 교수에 대한 질의 (노회찬 청문관)
참고인 최갑수 교수에 대한 질의 (송호창 청문관)
- 16:40~16:50 청문관들의 결론의 말
- 16:40~17:00 정리 및 폐회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 청문회 대상사건

- <모내기> 그림 사건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 청문관

- 최재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송호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진술인

- 신학철 그림 <모내기> 사건 : 성완경(인하대 교수)
- <한국사회의이해> 사건 : 장상환(경상대 교수)

○ 참고인

- 김정환 (시인)
- 최갑수(서울대 교수)

○ 사회 백승헌 변호사(민변 부회장)

○ 일 시 • 2005년 5월 9일(월) 오후 2~5시

○ 장 소 •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

○ 주 최 • 최재천의원실

○ 주 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인권운동사랑방

○ 후 원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인간적 시각으로 봐야 할 국가보안법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오늘 국가보안법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착잡함과 반가움이 교차했습니다. 우선, 50여년간 끈질기게도 생명을 이어오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건재한 현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돼 착잡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뛰어넘어 또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의 기운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돼 반갑기도 했습니다.

이 착잡함은 제가 몸담고 있는 국가인권위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좀더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모아내겠습니다. 또한 이 반가움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3개 인권단체와 최재천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되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인권을 다룰 때 정치적 시각보다 인간적 시각을 먼저 가져 주길 바랍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인권에는 피해자가 겪은 억압과 차별의 고통이 배여 있으며, 그 현장은 바로 인권의 싹을 틔우는 흙이 됩니다.

국가보안법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친인권적인가 반인권적인가 하는 문제의 답은 바로 국가보안법이 지나온 50여년의 역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역사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피해받은 각 계층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 직접적 피해자가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다수가 지니게 된 두려움과 자기검열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역사를, 그 역사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외면한 채 논의되는 국가보안법과 인권의 관계는 정치적 구호에 그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열리는 국가보안법 청문회는 더욱 뜻 깊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대상사건의 주인공이신 신학철 화백님과 장상환 교수님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들이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은 물론 표현의 자유마저 강탈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분들이 겪은 아픈 경험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친인권사회로 거듭나는데 좋은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쏟아졌으면 합니다.

국가보안법 청문회는 오늘 표현의 자유 문제를 시작으로 매월 1회씩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문회의 회차가 오래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몸과 영혼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오늘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개최는 우리 국회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이 청문관이 되어 피해자들이 겪은 인권침해 사례를 깊이 경청하고 문제를 파헤치는 자리로, 저는 마음깊은 데서부터 고마운 마음과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피해자들의 모든 가족들을 대신해 위로의 마음을 잠시나마 가져보게 됩니다.

반세기도 넘게 이 악법으로 인해 심신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에 한쪽이 절망으로 잠식되어 모든 국민의 의식과 행동이 자유와 양심에게서 격리되어 국가와 국민이 불신과 분노로 일그러지고 공포에 떠는 이 긴 세월에, 정의로운 양심이 이제 제 빛을 찾아가는 듯 힘이 납니다.

오늘 열린 1차 청문회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화가가 그린 그림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자식과도 같았을 그 그림을 강제로 작가에게서 빼앗고, 교수들의 강의교재를 이적표현물이라 하여, 강의실에서 내쫓으려 했던 사건을 대상으로 엮입니다.

먼훗날 우리 후세들이 이 사실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 세대를 살아온 늙은 어미로서 부끄럽기조차 했지만, 이런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이 청문회가 있어서 그나마 면피를 할 수 있지 않나 자그마한 위로를 삼게 되는군요.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루는 이런 청문회가 앞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이런 사건들이 역

사적으로 되새기는 자리에서나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만, 지난해 연말 싸움에 이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면, 우리가 국가보안법과 안녕할 그날이 쉽게 오겠나, 20년을 한결같이 거리에서 살아온 민가협 엄마들은 한숨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모이고, 또 모인다면 못 이룰 일도 없겠지요. 앞으로 청문회를 매달 개최하여 국가보안법 문제를 17대 국회의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니, 그 수고로움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열릴 청문회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더 나아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고문으로 몸과 영혼에 깊은 상처가 났으나, 여전히 구제받을 기회가 전혀 없는 피해자들을 더욱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청문회가 잘 되기를 빌면서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된 많은 선열 동지들을 추모하면서 악법의 문제점을 분석 연구하여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해야만 하는지, 모순과 부당성을 규명해 주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 개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뛰어준 활동가, 교수, 변호사, 보좌관 등 우리 젊은 일꾼들의 노고를 마음깊이 치하합니다.

국회내 공론의 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 있다.

민주개혁을 표방하고 탄핵정국을 돌파한 뒤 원내 과반수 의석(지금은 그 이하로 떨어졌지만 보안법폐지를 당론으로 하는 민주노동당 의석까지 합치면 아직도 사실상 과반수 의석이라 할 수 있음)을 차지한 집권여당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민의 배반”의 상징처럼 남아 있다.

주지하다시피 4·15 총선 이후 1년이 넘었지만 집권여당은 민주개혁과 관련해서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시대 민주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 할 4대개혁입법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언론개혁법은 지난해 말 통과시켰지만 알맹이는 싹 빠진 채 쪽정만 남았다. 과거청산법은 며칠전 겨우 통과되었지만 차라리 입법하지 말았어야 할 누더기법안을 통과시켜,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해야 할 운명이 되었다. 또한 지난 57년 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압살하는 원흉으로 작용해 온 국가보안법은 지난 5월2일 겨우 법사위에 상정되었고, 사립학교법은 아직도 오리무중 상태에 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었다. 더욱이 지난 52년 전인 1953년 형법 제정 시에 진작 폐지되었어야 할 법이었다. 또 4월 혁명 시기에, 6월 항쟁 시기에, 한편 유엔인

권위에서 거듭 폐지를 권고한 지난 1990년대에 벌써 폐지했어야 할 법이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난 2000년에. 최후로는 탄핵정국과 4·15 총선 직후에 마땅히 폐지되었어야 할 법이었다. 또 그리고 지난 연말 1,000명의 국민단식단이 노상에서 단식할 때 없어졌어야 할 법이다.

그러나 여전히 저 희대의 악법, “법”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저 괴물을 아직도 없애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제 참으로 어렵사리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지금부터라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진행시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국회내 공론의 장이 열리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자리이다.

우리 모두 원력을 모아 반인권악법, 반민주악법, 반민족악법,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기필코 폐지시키자.

진술자료

●
●
신학철 (화가)

내가 그린 <모내기>

신학철 (화가)

“모내기”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민족미술협회가 매년 주최하는 “통일염원” 전에 출품하기 위하여 그리게 되었다. 통일의 이야기를 탈춤에서 잡귀를 몰아내는 형상으로 반통일적인 요소를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을 그리려고 했었다.

그러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내가 찍은 씨래질하는 집안형님의 사진을 보고 모내기하는 과정을 통하여 통일의 이야기를 하기로 바꿨다.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통일의 이야기에 고향사람들이 등장하고 마을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 모내기 그림은 통일의 이야기를 벼농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아래에서 위로 시기별 순서대로 그린 그림이다. 모를 심기 위해서는 쟁기로 논을 갈고 논에 물을 끌어대어서 씨래로 논을 고르면서 나뭇가지나 돌맹이 비닐봉지 등 불필요한 쓰레기들을 걷어내고 모를 심는 것처럼 통일을 하려면 통일에 저해되는 요소들을 쓸어내야 한다.

즉 통일에 저해되는 요소란 통일을 가장 싫어할 것 같은 군사독재정권이고 미국도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 같고 일본도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또 통일된 세상에서는 38선의 철조망과 군사무기도 없어져야 할 것들이다.

이런 저해요소를 쓸어내고 모를 잘 심어서 거름을 주고 논을 메고 벼를 잘 자

라게 하여 가을에 풍년이 되어 벼를 베며 들밥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일된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통일된 세상은 법 없이도 잘살 수 있는 무릉도원 같은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림의 양측면과 맨위쪽 상단을 넝쿨식물과 감, 천도복숭아, 등지를 뜯은 새 등을 그려 장식했다.

서울에서 고향을 생각할 때면 마을 앞 파란 보리밭과 초가지붕위로 연분홍빛 살구꽃이 피어 만발한 고향의 봄은 꿈만 같아서 무릉도원의 이미지로 그렸다. 백두산을 그리게 된 이유는 전시회의 주제가 통일이기 때문에 그렸다.

이승만 정권 때부터 받은 반공교육(반공포스터나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자'라는 구호 등) 덕분인지 몰라도, 나는 통일의 이미지로 백두산의 형상이 떠오른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일은 정말 좋은 것이고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리려고 했다.

모내기 그림은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그려졌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진술자료

●
●
성완경 (인하대 교수, 미술평론가)

<모내기> 작품 감정서

성완경 (인하대 교수, 미술평론가)

신학철은 민중미술권 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화단 전체에서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중견화가다. 60년대 말 서구 전위미술의 적극적인 수용으로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신학철은 모더니즘의 맥락에서 70년대 중반의 오브제 작업과 70년대 후반의 콜라주 작업을 통해 우리 일상적 삶을 위협하는 대량소비 사회의 물신성을 충격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우리 삶의 현실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 후 80년대 초반 신학철은 보다 구체적인 역사현실로 다가가 우리의 근대사를 특유의 해석과 탁월한 상상력으로 포착한 일련의 <한국현대사> 시리즈를 발표함으로써 화단의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이 연작은 일제하 우리민족의 수난으로부터 독립운동, 해방을 거쳐 동족상잔의 전쟁과 분단, 전후의 굴절된 정치사와 사회사, 외래문화의 범람 등으로 이어지는 민중의 수난사를 날카로운 비판의식으로 형상화한 뛰어난 역작이자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후 신학철은 우리의 민족사를 단지 '수난'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만이 아니라 그 속에 면면히 이어져오는 민중의 건강한 생명력과 민족문화의 힘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 미래의 통일된 세계 내지는 바람직한 민족 공동체에 대한 염원과 그 묘사에로 발전해 나갔다. 이것은 80년대 민중미술의 흐름 속에서 그가 획득한 긍정적 전망이자 이후 우리 미술이 나갈 길을 예시해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평가는 1989년 월간미술이 80년대를 마감하면서 기획한 평론가 15인이 선정한 80년대 한국미술의 대표작가 중 최다 득표(9표)를 한 작가라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신학철은 이처럼 한국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의 한사람이다.

<모내기> 그림에 표현된 주제와 형식상의 특징이 그림의 주제가 반외세, 자주통일에 대한 염원과 민족공동체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회구라는 점은 누가 보아도 확연히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작가가 이 그림을 제작한 동기가 민족미술협의회가 매년 주최하는 <통일

전>에 출품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또한 이 점을 분명히 뒷받침한다. 이처럼 통일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작가는 두가지 대립항을 설정하고 그것을 작품의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고 보아진다. 하나는 통일의 주체로서의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농민들과 농촌풍경이다. 모내기를 하는 사람이나 씨레질을 하는 사람, 가을 추수꾼이 옆에서 함박웃음을 웃거나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 매미체를 들고 뛰어가는 어린애들, 복사꽃 핀 마을 풍경 등이 모든 것의 공통된 것이라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신들의 강토에서 근면, 자조 자립하여 사는 훼손되지 않은 농촌공동체적 삶의 정서이다.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삶의 자기 충족적인 순결성에 대하여 이질적이고 비본래적인 잡다한 오염물질의 모습을 한, 다시 말해 쓰레기의 모습을 한, 온갖 사악한 힘들과 외래 소비문화의 표상물들이다. 핵무기, 탱크, 레이건, 나카소네에서부터 코카콜라와 양담배, ET와 매트헨터와 람보, 그리고 38선의 철조망 등 뒤영킨 이 쓰레기들은 단지 위의 순결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림 전면의 농부와 소는 씨레질로 이것들을 몰아냄으로써 강토의 순결성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몰아냄'이 여기서 한결 높은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 이 지점이라고 본다. 즉 그것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온갖 힘과 문화-작가 자신이 말하듯 미일 외세와 군사독재 정권 그리고 외래의 저질 퇴폐문화 등을 몰아내어 민족통일을 이루고, 그리하여 우리의 잃어지고 훼손되었던 삶의 원형을 회복시키는 적극적 실천적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땀 흘리고 일하고 먹고 웃고 춤추는 농민과 뛰노는 어린이의 모습, 그리고 농촌의 풍경은 그것이 농민이라거나 농촌풍경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민족의 소중하고도 준엄한 삶의 표상이요, 우리가 밭을 딛고 있는 이 땅의 신성함에 대한 정서적 환기라는 점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작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첨가함으로써 이 강토와 여기에 깃들인 삶의 신성함과 준엄함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회복되어야 할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그림에 나타난 표상들은 현실의 일상적 묘사적 표현물이라기보다는 상징적 표상물로 주목되어야 하며, 그것들을 담고 있는 공간도 자연주의적 사실주의의 공간이 아니라, 종합주의적 상징주의의 공간이라는 점이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주의적 화면구성이라는 것은 19세기 말 프랑스의 상징주의 미술에서 보듯이 인물이건 동식물이건 사물이건 풍경이건, 그것들을 문학적 서술구조와 상징적 의미연관에 따라 시간적 공

간적 제약 없이 2차원 평면 위에 자유로이 병렬적으로 또는 구성적으로 종합, 배치 또는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신학철의 <모내기> 그림에서의 화면 공간은 기본적으로 바로 이러한 종합주의적 구성 원리에 기반하여 이해되어야 할 화면 공간인 것이다. 비록 그림 속의 인물이나 사물이나 풍경이 전체적으로 단일한 풍경적 공간 속에 원근이나 앞쪽과 뒤쪽 등이 구별될 수 있게 배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자연주의적인 단일 공간 속에 사실적 인과관계에 따라 배치된 것이라고 보아서도 안 될 것이다.

특히 검사 쪽의 감정서에서와 같이 화면 전체를 아래위로 연속된 한반도 지도로 간주하여 위쪽의 백두산을 배경으로 한 행복한 농촌 풍경을 북한이라 보고, 씨레질로 쓰레기를 밀어내고 있는 아래쪽을 본다는 것은 이같은 화면 공간의 특질이나 그 구성 원리의 기본적인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화면의 아래쪽과 위쪽은 동일 공간의 아래와 위 또는 남과 북이 아니라 시간의 선후를 한 공간에 병렬 표현한 것이다. 즉 화면 아래쪽이 선, 화면 위쪽이 후로서, 씨레질로 외세를 몰아내고(아래쪽) 통일을 이루어 강토의 순결성을 회복한 모습(위쪽)을 배치한 것이다.

그렇다면 농부들은 이 쓰레기들을 어디로, 적어도 어느 방향으로 쓸어내고 있다고 해야 할까. 이 질문이 의미 있는 것이라 가정할 때, 그 올바른 답은 그림의 '아래'나 '남쪽'이 아니라 그림의 '앞쪽' 즉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들 쪽으로, 더 올바르게 이야기해서 그림의 '바깥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그림의 안쪽이라는 것의 의미가 더 정확해지고 그 내용 또한 풍부해짐을 즉각 알게 된다. 안쪽이란 여기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 즉 통일된 나라, 통일된 민족의 해방세계이며, 외세를 몰아냄으로써 순결해진 우리의 정신의 고향, 통일조국의 이상향인 것이다.

작가는 그 세계의 이상향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외세를 몰아내고 통일을 이룬 후의 그 절절한 꿈의 세계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스러운 이상향이자 동경의 세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앞서 말한 바 있는 종합주의적 상징주의 수법으로 중요한 요소를 이 그림에 첨가했는데, 그것이 이 그림의 좌우와 위쪽을 웨어싼 두 마리 산비둘기가 다정하게 깃들여있고, 천도복숭아가 탐스럽게 열려있는 나무숲의 장식이다. 이것은 마치 레스토랑의 메뉴 표지의 테두리 장식이나 앨범 표지의 장식처럼 아름답고 달콤한 동경이나 추억을 자아내는 장식이다. 작가는 통일조국의 이상향을 이러한 장식 속에 진정이 담긴 마음으로 신성하게

신학철의 <모내기> 그림, 10년 후

성완경 (인하대 교수, 미술평론가)

1. 신학철 선생의 <모내기> 그림이 제작된 것이 1987년, 지금부터 11년 전 일이다. 대충 10년이라 하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동안 국내적으로나 국제적, 전지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제적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사회주의권이 몰락 되었으며 과학기술의 가속적 발전과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국경 없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촉진된 속에 이른바 지구방화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국내적으로는 이같은 전지구적 변화를 일정 정도 반영하면서 중요한 정치적 변화도 있었다.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거쳐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 정부가 탄생했고, 이는 해방 후 반세기 만의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를 기록했다. 신학철의 대법원 판결은 그것이 바로 이 같은 정권교체 직후에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충격과 모호성을 더욱 느끼게 한다. 왜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가의 이야기는 생략하겠다.

10년 전이라면 이 같은 판결이 야기하는 정치적 문화적 긴장의 강도가 지금보다 더하고 명료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우선 이 사건은 그리 큰 문화적 정치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워낙 이 판결 자체가 거의 실소를 자아낼 만큼 의외의 것이고 시기 부적절한 것이어서 우선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문제 삼으면서 그 의미를 짚어보게 하는 주체들, 그러니까 우리 민중미술계 작가들이나 민주화 세력 인사들, 이런 주체들의 역사적 위상이 어떤 모호성 속에 놓여있는 점에서, 그들의 뚜렷한 결집점 내지 입장 형성이 어려워져서 그렇다는 점도 이야기해야 될지 모른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 자신의 모호성 자체부터가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새로운 구도로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해석, 어떤 이야기를 '발명'할 것인가,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속도'라는 화두와 더불어 이야기를 풀어가 보고자 한다.

모시고 싶었던 것이다. 이 감미로운 장식의 테두리를 갖지 않는 곳은 오직 단 한군데, 이 그림의 바깥쪽을 향해 열린 곳, 즉 추방되어야 할 퇴폐문화와 폭력과 외세의 쓰레기의 출구 쪽 뿐인 것이다(남해 바다로 쓸어 넣는다는 검찰 측의 해석이 얼마나 협소한 기계적 해석인가가 이 점에서 명백해진다).

또 한가지 흥미 있는 지적이 여기서 가능하다.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그림 아래쪽의 이 얽혀있는 쓰레기들의 대구(對句)가 될 대립항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하는 물음이다. 화면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음미할 때, 감정인은 그것이 화면 위쪽의 천도복숭아와 산비둘기가 있는 장식부위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적어도 양과 형태와 색채상으로 그 둘은 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내용상으로도 그림의 의미가 더 풍요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까. 감상하는 눈의 이같은 상상적 애무 속에서 그림읽기라는 이 문화적 즐거움의 여유로움과 자유 속에 비로소 한 작품의 예술성이 더욱 풍요로운 두께를 갖고 그 시적 울림의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아닐까. 작가 신학철은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인 경북 금능의 천도복숭아 숲을 회상하며 이 부분을 그렸다고 본 감정인에게 말했다. 아래쪽의 쓰레기와 대구가 되지 않겠는가 자문해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다. 검사 측의 감정서에서 만경대를 그린 것이라고 강변되고 있는 화면 중상단 좌측의 복사꽃 핀 농촌마을의 풍경 역시 이 천도복숭아의 추억과 꼭 같은 울림을 그림 속에서 갖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봄날 농가의 화사한 복사꽃과 들판의 농부들의 씨래질과 모내기-매미채를 들고 뛰노는 여름철의 아이들-가을 추수 걷이 옆에서 춤을 추거나 모여 앉은 농민들 등

신학철의 <모내기> 작품은 이처럼 단순히 통일을 주제로 한 그림일 뿐이 아닌 내용과 형식의 풍요로운 결합을 보여준 중요한 작품이며, 민족미술의 한 이정표가 되는 걸작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본 감정인은 생각한다.

* 이 자료는 <모내기>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제출한 <모내기> 작품에 대한 전문가 감정서이다.

2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속도가 있다. 네 가지의 속도를 생각해보자. 그 첫째로, 물의 속도가 있다. 이것은 대자연의 순환의 속도다. 마침 신학철 선생의 작품 제목이 <모내기>인데 이것은 물의 이미지와 더불어 대지에 돌아온 봄의 생기를 느끼게 한다. 2월 달이 되면 얼었던 대지가 녹으면서 그 안의 얼음이 조금씩 조금씩 녹아 흐르게 되면서 봄의 개울로 흐르고 차츰 녹음방초가 우거지면서 여름으로 이어진다. 이것에서 세월의 변화를 느낀다. 물은 대자연의 순환이나 그 순환 속도에 대한 상징일 뿐 아니라 또 그 측정 단위가 되기도 한다.

두 번째 속도는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것이다.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으며, 이를테면 기술공학이라든가 인지환경, 즉 지각하는 환경의 변화라든가 또는 그와 연관되는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경제생활의 변화, 문화환경의 변화 등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 이런 환경의 변화는 놀라운 정도로 빠르고 전면적인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는 대단히 컸다. 이 변화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행동에 대해 그리고 개인의 영역과 공적 생활의 여러 관습과 제도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세 번째 속도는 위와 연관된 것이면서 보다 더 제도와 권력에 관계된 속도다. 즉 정치 변화의 속도, 사회제도, 권력구조 등 이런 것들의 변화 속도다. 역사의 변화는 최종적으로 이런 제도들의 변화와 더불어 안착된다. 앞서 두 번째 얘기했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도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사회의 여러 장과 모든 사람들의 삶의 구조에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에는 늘 권력과 제도의 문제가 따른다. 우리 사회는 대체적으로 정치제도 및 권력제도의 구습이 만연해 있고, 이것들은 너무 전근대적이고 변화가 더딘 영역으로 남아있다. 사법제도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네 번째 속도는 예술의 속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엇이다. 예술의 속도는 사물에 관한 미적 감수성의 변화, 예술 언어의 변화의 속도다. 예술가는 무엇보다 속도라는 문제에 민감한 사람들이다. 직관을 가지고 시대와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 본다는 점에 있어서나 또한 미래적 변화의 핵심을 남보다 예민한 촉각으로 짚어내고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예술의 세계는 무엇보다도 변화와 속도에 민감한 세계다. 속도의 문제를 캐치하지 못한 예술가는

실패한 예술가다. 지각의 속도, 지각의 조건, 또 감동의 조건, 결국 모두 보면 한 박자 틀리면 다 틀리는 것이 예술인 것이다. 사멸한 양식이나 언어에 매달리는 예술가들이 있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개념들로서 문제제기를 하는 예술가들이 있다. 예술이 새로움의 문제라는 것은 곧 예술이 새로운 개념, 새로운 태도, 새로운 언어의 창조를 생명으로 하는 영역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보면 예술가란 얼마나 속도의 직업인가. 모든 미술사, 비평, 좋고 나쁨의 기준, 심지어 호당 가격도 속도와 연관된다.

위와 같이 대자연의 순환의 속도, 사회환경의 변화속도, 권력 및 제도의 변화속도, 예술에서의 속도 이렇게 네 가지로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속도를 열거해 보았다. 이 네 가지 속도가 사회 속에서 항상 균질적 조화 관계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사회 변화는 대체로 이 상이한 속도들 간의 균형과 불균형의 교차로 이루어진다. 역사는 끊임없는 파괴와 생성 속에서 그 작용과 반작용, 변화와 수구 사이의 동력학 속에서 발걸음을 옮겨왔고, 그 발걸음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냈으며, 그 역학과 궤적이 곧 역사 그 자체였으며 역사 변화의 속도이기도 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역사의 중요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 사회다. 모든 변화를 잘 읽어내야 하고, 불균형의 지점을 제대로 보고 우리를 상생시키는 균형의 지점이, 그 방향이 무엇이고 어디인지를 잘 간파해 나가면서 역사 변화의 진로를 잡아나가야 된다. 이같은 큰 시대적 과제 앞에서 신학철 사건은 얼핏 보아 미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해결 못한 불균형의 징후를, 그 속도감의 불안한 편차를 담고 있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적 좌표의 모호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고 본다.

3. 신학철 사건은 이중의 폭력 내지 이중의 결핍의 결과이다. 첫째는 국가보안법 등 사법제도 내지 공권력의 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식민지적 미술관이 온존하는 미술계의 미술인식 상의 결핍과 오류에 의하여 방조된 폭력이다.

우선 사법 권력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살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사건은 예술가의 표현자유와 그 사법적 제재간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요한다. 민중미술가들은 예술의 창작의 자유라는 것을 무제한적인 낭만적인 자유로 보았다기 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회적 도덕적 책임과 사회 정치적 문제의 개입을 포함하는 문제로 보았다. 이런 맥락에 설 때 창작의 자유라는 것은 미술가가 자신의 사회정치적인 견해를 미술창작을 통해 표현

할 수 있는 사상적 표현의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된 의미를 띠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사상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약되어 왔고 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이를테면 한 개인의 의식 형성에 관계되는 부분이나 내밀한 개인적 표현이나 형상화, 일기, 메모, 서신 등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사상표현 자유를 빼앗긴 채로 어떻게 창작이 가능하고 앞서 얘기했던 속도의 표현이 가능하겠는가. 사법제도가 행사하는 위임받은 폭력은 그것이 도덕성이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 도덕성과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생기는가. 변화의 불가피성이 도덕성이고 진리다.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때 사법제도는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폭력으로 전락한다.

그것은 사회구성원을 꺾어버리고 집단의 숨통을 조이는 야만적 폭력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아직 온존하는 것이 우리 정치사의 무능의 결과라는 것에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검찰과 법관들에 의한 법운용 내지 법리 해석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다. 보다 근원적인 것은 국가보안법 자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상표현의 제약은 완전한 시대착오이고 우리 불행한 정치사가 분비해낸 희극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신학철 사건을 이 대명제를 떠나 제대로 이야기하긴 불가능하다.

4.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의 작품세계와 관련해서다. 신학철 선생의 예술가적 진지성과 그 전위성의 핵심은 바로 그가 예술과 사회와의 관련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와 견해에 있다. 이 점은 법리 해석을 하는 사직당국이나 미술계의 사람들이 크게 눈을 뜨고 제대로 보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다. 신학철은 이제까지 한국 현대미술의 주류를 형성해 왔던 이른바 형식주의적 모더니즘의 순수성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이 그 모태이자 그 관객이기도 한 사회 및 사회대중에 대하여 그리고 역사 및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놓이느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 깊은 고뇌와 성찰을 했던 작가다.

그 답의 하나로 이 <모내기> 그림이 나온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작품의 진정한 주제는 그것이 묘사하고 있는 소재에 있다기보다 그의 예술적 고백 그 자체에 있다고 해야 할지 모른다. 이 작품이 보여주는 명료성과 일러스트적인 선연성이 바로 그 고백으로부터, 그 자신의 고뇌 끝의 확 트인 결론이기도 한 그 선언적 자기 표백으로부터 오는 것일지 모른다. 자신의 예술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나 할까. 그만큼 이 작품은 그의 예술적 자기고백

이며 그가 목격했던 한 시대의 고뇌에 대한 답이고 또한 증언이기도 한 작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모내기>는 이처럼 신학철이라는 작가의 예술적 의식의 역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모멘트를 증거하는 작품이다. 또한 그것은 80년대 한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문예적 자료이자, 한국 현대미술사의 가장 소중하고도 의미심장한 한 순간, 한 획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5. 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제대로 봐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예술에 있어서의 프로파간다적 성격 내지 정치적 선동성에 관한 문제다. 폴리틱칼 일러스트레이션 내지 정치적 회화로서의 선동성과 대중전달의 명료성은 신학철 작품의 최고의 성취가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제대로 평가하고 문화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일이 미술인들의 의식에서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법리 해석자들의 미술인식도 결국 미술계 인사들의 통념적 사고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때로는 미술계의 내노라하는 교수나 평론가들이 검찰이나 법관에게 그들의 암전하고도 편협한 미술인식을 빌려주기도 한다. 검찰 기소문이나 법관의 판결 이유서에 이런 이름 몇몇이 실제 등장해 있기도 하다. 부끄럽고도 두려운 일이다. 사실 이들을 포함한 한국의 많은 미술가, 미술평론가, 미술사가 등 이른바 미술관련 전문가들이 60년대 말과 80년대 초 이래 여러 차례 그 자신들의 신중함과 순수주의를 가장한 소아병적 미술관으로, 이같은 성격의 미술을 이른바 정통적 미술의 본령에 부합되지 않는 저급하고 불온한 경향으로 제외시키고 저주해 왔고 정부당국이나 공안관계자들의 자문에도 응해 왔다. '이것은 포스터지 미술이 아니다' '이것은 선동그림이지 미술이 아니다' 등이 대표적 저주들이다. 선전선동성 및 일러스트레이션적 속성은, 이를테면 서양의 오랜 시각예술의 역사 속에서 그 가장 풍요한 전통의 한 부분이었다. 이를테면 카리카튀르, 폴리틱칼 그래픽스, 삽화도서, 포스터, 각종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서사적 형상회화, 포토 몽타주, 초창기 영화 및 할리우드의 영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와 형식의 시각예술 속에서 그 풍요로움을 보여주어 온 것이 예술의 이 선동적 대중성이다.

신학철의 가장 분명하고 오리지널한 예술적 성취이자 그의 예술의 깊은 '제의적' 성격과 사회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의 '따뜻함'과 순수성이 드러나는 작품을, 이른바 선전선동적 명료성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약간 거북해하고 두려워하며 지목하는' 작품들, '마치 논두렁에서 주운 이북에서 날라온 뼈라의 그림과도 어딘가 닮은 듯한' 그런 작품들, 만화나 일러스트 비슷하기도 한 그런 작품들이라고 나는 꼽는다(이와 관련하여 <갑돌이와

갑순이>, <바우고개> 등 신학철의 가장 성공한 작품이라고 연사가 평가하는 작품들 몇몇을 예시하며 설명). 신학철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노동자이고 싶다. 즐겁 그 자체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내가 섬기는 것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 작업실에 씨불이고 작업을 해온 작가다.

이같은 새로운 미술인식의 태도는 이제까지 한국 미술사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다. 어떤 미술 전문가가 어떤 지식으로, 그리고 어떤 공권력이 어떤 권위로 이같은 명료한 현대적 미술인식을 음해하고 말살할 수 있을 것인가. 신학철의 <모내기> 작품 속에서 씨래질로 추방되고 있는 것이 어찌 외세와 군사문화의 쓰레기들만이라. 소아병적 순수주의라는, 비루하게 주눅 들고 겁에 질린 우리의 식민지적 미술인식 또한 강토 바깥으로 씨래질 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진술자료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의 경과와 소감 ;

장상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05년 3월11일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를 확정판결함으로써 1994년에 시작된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이 11년만에 마침내 끝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재는 사회과학의 한 방법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의 사회 인식들을 수용하여 한국사회의 현실을 분석한 외에, 노동자, 농민 중심의 사회변혁 등 사회적 행동을 주장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등의 대한민국의 안전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 없는 이상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고 이 내용을 강의한 것을 두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판결이지만 11년이라는 오랜 기간 시달려왔기에 실로 감회가 크다. 무죄 확정판결을 접하면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의 경과와 사건을 겪으면서 본인이 느낀 소감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1.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중앙과 지방의 기득권 세력들이 미래의 진보로 향하는 진보적 연구자의 발걸음을 과거시대의 잔존물인 국가보안법으로 가로막으려 한 것이다.

1) 김영삼 정권 내의 지배세력

이 사건은 중앙정부에서는 문민정부 내의 수구세력, 공안세력이 이 사건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함으로써 정부 내외의 민주세력에게 타격을 입히고 자신들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들은 모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에 소속된 진보파 교수들이었다.

1993년 문민정부 수립 후 군부독재와 연결된 수구세력은 군부 내 하나회 척결 등으로 위치가 약해졌다. 이 수구세력들이 1년 동안 숨죽이고 있다가 김일성 주석 사망 후 조문파

동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박홍 서강대 총장이 다수 주사파가 암약하고 있다는 고발을 한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을 터뜨렸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도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8월 30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영장심사를 기다리며 보안분실에서 하룻밤 자면서 듣고, 그 후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알게 된 사실인데 검찰은 사건을 발표하기 전 수개월 전부터 이 사건을 내사해왔다. 수사관들의 말에 의하면 보안분실에 소속되어 있는 수사관 10여명 전원이 두 달 동안 다른 일은 제쳐두고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만드는 일에 매달렸다고 한다.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책을 그들의 수사지침에 따라 줄을 쳐가며 분석하는 일과 강의를 수강한 학생을 면담하는 일, 경상대학교에서 출석부 등의 자료를 입수하는 일 등이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수차례 창원에서 진주로 출장을 다녔다고 한다. 엄청난 국력 낭비로서 공안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냈다고 해야 할 것이다.

8월 30일 구인에 응한 후 경남도경 보안분실 사법경찰관은 공안문제연구소에서 감정한 데로 이적의 의도를 가지고 집필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나를 조사한 경찰관은 나의 사상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이른바 NLPDR)인가 민중민주주의(PD)인가에 관심을 가졌고, 내가 책에 쓴 내용을 근거로 양쪽 모두에 비판적이라고 하자,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정부의 주도세력인 김영삼 핵심측근들로서는 문민정부로 요란하게 선전하던 김영삼 정권의 성격을 집필교수들이 이완된 파시즘이라고 규정한 것을 수용하려 하지 않고, 꽤 씩씩하게 생각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대학교재를 이적성교재로 몰아 파시즘적 성격을 완전히 탈각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었고, 이완된 파시즘이라는 집필교수들의 정권 성격 규정이 옳았음을 입증해주었다.

2) 진주지역의 기득권 세력

1994년 여름 방학 중에 이 책이 신문의 지면과 전파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때 의아하기 짝이 없었다. 그로부터 45년 전부터 강의교재로 사용해 온 책이었기에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적성' 운운하는 꼬리를 붙인 기사와 검찰 소환을 접하고는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주라는 지방 도시에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5도(盜) 10적(賊)이라고 불리는 토호들이 있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직후 지역토호세력 척결정국이 조성되자

『진주신문』에서도 그 기회에 지역 토착비리를 뿌리 뽑자는 뜻에서 열심히 취재를 하여 보도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진주신문』은 시민 1000여명이 소액 주주로 참여하여 창간한 주간 신문으로, 정진상교수와 나는 당시 이 신문 '논단'의 고정 필자로, 번갈아 글을 쓰고 있을 때였다. '논단'에서 당연히 5도 10적, 그 중에서도 특히 사학비리를 저질러 온 강모씨를 비판하고 논설을 기고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될 줄을 전혀 모른 채 말이다.

그 때까지 자신을 비난하는 소문은 무수히 들었겠지만 진주 바닥에서는 공개적으로는 한 번도 어느 누구의 비판도 받아본 적이 없던 강모씨로서는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강모씨는 진주신문사 사장과 기사를 쓴 진주신문사 기자를 고발하는 한편, 나와 정진상교수에 대해서는 엉뚱한 보복을 시도했다. 당시 경상대학교 민교협과 전교조 진주지회가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에서 당시 금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한 강모씨를 비판하는 내용을 문제 삼아 전교조 진주지회장과 당시 경상대 민교협 회장이었던 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사 기소가 되면 자동으로 직위해제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발을 취하하고 말았지만, 강모씨의 보복 의지가 줄어들기는커녕, 이번에는 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분풀이를 하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강모씨는 진주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던 당시 안기부장 특보 조모씨를 통해, 『한국사회의 이해』 개정판 발간을 기다리더라도 한 듯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사건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본격적으로 수사가 착수되기도 전에 사사로이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감정을 하는 편의를 보아주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는 1994년 5월 24일자 감정서와 7월 11일자 감정서 2건이 있는데 전자는 안기부 모 인사의 청탁으로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감정서로 추정된다.

나는 자료를 통하여 그의 사학비리를 비판하는 글을 썼을 뿐인데, 토호세력 강모씨는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진보적 교수들을 궁지에 몰아넣음으로써 보복을 하려 한 것이다. 그의 행태에 나는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지역 토호들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가권력을 농단한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3) 경상대학교 내 수구보수세력

경상대학교 내의 일부 수구적 교수들은 <한국사회의 이해> 수강생이 많은 등 자신의 이해관계에 위협을 느낀 것인지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들 가운데 네 명의 교수를

‘빨갱이 교수’로 몰아서 학교에서 축출하려고 했다.

8월 30일 오후에 검찰은 오후 7시에 ‘나라와 대학을 걱정하는 한 교수’라는 익명으로 8월 19일자로 김덕 안기부장에게 투서한 편지를 공개했다. 익명의 투서를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검찰이 강한 사법처리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이 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이번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중 장상환, 정진상, 백좌흠(인도유학중) 3명과 정성진 교수(미국유학중)는 속된 표현으로 빨갱이임이 확실하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법처리하여 대학 강단을 떠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만일 이번 기회에 사법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젠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주어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을 것이며, 이것이 비단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교양과목 시험에 “미제국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없이는 A 학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이며, 이들이 출제하는 기말시험 문제 중에서 하나만 든다면 김우중과 박노해를 비교하고 어느 쪽이 참인지를 기술하라” 등 노골적으로 빨갱이 교육을 시키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이들이 대학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된 데에는 5.6공화국 시절에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부 당국의 논리를 격파해왔으며, 문민정부 출범 후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교감을 같이 해온 정부 내의 고위직 정책결정자들과의 연결도 이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저희 대학의 이적성 교재 문제에는 청와대 김정남 교육문화수석이 관여하여 문제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한편으로는 영남대 이수인 교수(전 합평 국회의원)를 통해 대검차장(최환)에게 이 문제를 축소해주도록 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 투서 아래 부분은 문민정부 내의 여러 세력 간의 권력 투쟁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 발생 후 경상대학교 대학당국은 8월 16일 교양과정위원회를 열어 <한국사회의 이해> 강좌를 폐강하는 신속성을 보였다. 그리고 빈영호 총장은 집필교수들의 사법처리를 바라는 뜻을 피력하며 사퇴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는 문교부와 검찰 등 정부 당국의 엄청난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집필교수들과 민교협은 이것이 학문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조치라며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2000년 7월 24일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후, 그리고 2002년 8월 24일 고등법원에서 역

시 무죄판결을 내린 후, 집필교수들은 대학 당국에 <한국사회의 이해> 과목을 다시 개설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당국은 이에 대해 최종 판결 때까지 기다리자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4) 보수 언론

보수 언론은 한국사회의 이해를 공동 강의한 교수들을 이념적 편향을 가진 교수로, 『한국사회의 이해』를 삼류 교과서라고 폄하했다. 보수 언론들은 검찰의 발표를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함께 보도한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마치 경상대학교의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교수들이 김일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친북 교수인 것처럼 매도했다.

예컨대 동아일보 1994년 8월 3일지는 이렇게 보도했다. <대검 공안부는 지방에 있는 K 대학의 교양교재가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등 이적성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교재를 공동으로 저술한 지방대 교수 9명 중 7,8명에 대한 수사 중이다. 최환 대검 공안부장은 2일 “대검의 공안연구관들이 검토한 결과 이 교양 교재는 계급대립을 강조, 계급혁명과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2개월 전 관한 지검에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 교재명과 저자 이름은 수사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일부 교수들의 강의내용과 기고문에도 이적성향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는 경남지방경찰청 보안분실이 7월 27일 경상대학교 앞 서점에서 『한국사회의 이해』 13권을 압수할 사실과 『한국사회의 이해』의 저자 9명의 이름을 밝혀서 사실상 『한국사회의 이해』가 수사대상임을 밝혔다.

또한 중앙일보는 8월 4일자 사설의 제목을 「붉은 교수 사실인가」라고 붙이고 “학문연구의 주체이며 이 사회를 이끄는 지성의 대표라 할 대학교수가 이적성 교재로 학생들을 오도했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학문풍토이다. …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들 소장파 교수들이 객관적 연구와 사실적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지난날 자신들 학생시절의 낡은 논리를 오늘의 대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북한의 장학금을 받아 대학교수가 된 사람도 있다는 충격적 진술과 함께 이 땅에 붉은 교수가 있다는 의혹은 차제에 신중하고도 엄정하게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 8월 4일자 사설 제목을 「계급혁명 가르친 교수들」이라고 붙이고 “... 대학의 교수들이 용공 이적성 교재를 저술, 출판해 버젓이 교재로 사용, 학생들에게 북한이 주장

하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계급혁명을 부추겨왔다면 이게 어디 보통 일이란 말인가. ... 북한의 장학금으로 교수가 된 자가 있다는 박홍총장의 또 다른 고발이 이런 교수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8월 5일자 사설 제목을 「**이적성 교재의 오류**」로 붙이고 이렇게 썼다. “이번에 문제된 교재는 세 가지 점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첫째, 한국사회의 성격을 미국 자본주의에 종속된 신식민지 국가자본주의체제로 규정하고 이는 밑으로부터의 투쟁에 의해서만 극복되고 변혁될 수 있는 인식론이다. ... 둘째,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한 부정적 자세다. ... 셋째,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이론을 비판적 안목이 아직 형성돼 있지 않은 대학 저학년들에게 ‘현실에 대한 초보적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가르쳤다는 사실이다”

조선일보는 8월 5일자 사설의 제목을 「**학문의 자유란 무엇인가**」라고 붙이고 경상대학교 교수들이 ‘이 사건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학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아무래도 특정한 하나의 주장이나 학설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하여 명멸한 다양한 학설의 소개이며, 동시에 앞으로 바른 학문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론의 비교 안내일 것이다. ... 그런데 이들은 대학에 들어온 어린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편향성이 강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다른 주장이나 학설은 아예 배제하고 있다. ...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의 대학인이며, 학문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의 정신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다만 중앙일간지 중 한겨레신문만은 집필 교수들이 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기한 반론을 비교적 충실히 보도하면서 검찰의 수사 자체에 의문을 표했고, 이 후에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사태 전개를 보도했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본인을 비롯한 집필교수들은 8월 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일차적으로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사설에서 ‘붉은 교수’라고 지칭하면서 검찰 발표를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해당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정정보도와 반론권을 요청하는 중재신청서를 냈다.

요컨대 정부의 공안세력, 지역사회 기득권세력, 경상대학교 내 수구적 교수, 보수언론이 힘을 합쳐 구시대의 잔존물인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진보적 연구자들인 집필교수들을 학교에서 축출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썩은 동아줄로 한창 자라나는 나무를 동여매어

성장을 막으려 한 것처럼 무모한 행위였다.

2 민주진보세력은 기득권세력의 기도를 저지했다.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벌어지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진보학계와 문화예술계, 지역 민주화운동세력은 이 사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성명서 발표, 집필자와 해당분야 연구자들의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검찰의 사법처리에 저항했다. 다수 경상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인근 학교 평교수들도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반대하는 뜻을 성명서로 표명했다.

집필교수들과 ‘학문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모인 민교협, 민변, 국교협,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민족문화작가회의, 대학강사노동조합, 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학술, 교육, 언론, 문화단체들은 이 사건이 학문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집필교수들은 8월 4일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한국사회의 이해’는 대학교양과정의 다양화를 위해 집필되었고,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과학계에서 축적된 한국사회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집필되었으며, 현대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른바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표현물...’ 운운하는 감정결과는 ‘한국사회의 이해’ 내용을 명백하게 왜곡한 것이다. ... 이 사건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 이 사건은 검찰당국이 언론조작을 통하여 사회를 이른바 공안공포 분위기로 몰고 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교재 집필 교수들은 처음에는 검찰의 강제구인에도 응하지 않으며 강경대응을 하다가 8. 30.에 수사기관의 구인에 응하였다. 9월 1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어 학교에 경찰이 재진입하는 경우 학생들과의 충돌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였다. 그리고 검찰의 사건 발표 후 한 달 가량이 경과하면서 집필교수들과 경상대학교 동료교수들, 여러 단체 교수들과 회원들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저희 교재와 강의를 사법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집필교수 정진상, 장상환에 대해 구속을 시도한 것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최인석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제동을 걸었다. 최인석 판사가 「영장청구 기각 사유서」에서 든 영장기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의 내용이 시중 서점에서 유통되는 진보적 사회과학 서적이거나 간행물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사회의 사상적 건강상태가 그 정도의 내용을 소화해내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며, 둘째, 피의자들은 북한의 체제 및 사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그들이 남한을 '식민지 반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독립적 주권을 갖고 있는 것과 한국에서의 고도 자본주의 발전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이론이며, 수령론, 후계자론 등도 독재 및 혈통세습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이론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고, 그 변명과 비판내용의 깊이와 정연함이 임시로 곤경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으며, 셋째, 피의자들이 강의시간 외에 별도로 소위 주사과 등 운동권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접촉, 교류한 사실이 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를 강의교재로 한 강좌는 이미 폐강된 점, 학문의 자유 또한 법이 보호하여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인 점 등을 비추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과 같은 경우, 가의과목이나 교재의 선택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개입보다는 대학 자신의 자율적 조절기능에 맡기는 것이 여러 모로 낫다고 생각되며, 넷째, 자진 출석, 진술했으므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장 기각 사유서는 최인석 판사가 창원 지법의 다른 판사들과 함께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를 직접 읽어보고 내린 판단으로 검찰이 이 사건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최인석 판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한국일보는 「석연찮은 영장 기각」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고, 조선일보도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이라는 사설을 썼다. 단 한겨레신문에서는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해한 판사」라는 제목으로 영장기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설을 썼다.

검찰은 결국 1994년 10월 31일-11월 10일간의 검찰 조사를 거쳐 11월 30일 나와 정진상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집필교수들을 기소유예(출국중인 교수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의 시도는 실패한 것이다.

나와 정진상 교수는 기소되면서 직위 해제되었다가 다시 복직되었다. 종래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 당국은 나와 정진상 교수가 11월 30일에 기소된 즉시 직위해제했다. 우리는 직위해제 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부산고등법원에 제출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자동으로 직위해제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73조 2의 1항 단서조항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직위해제가 부당했다고 판결했고, 학교당국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었다. 그런데 종전에 상지대 교수들의 학교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사립학교원의 국가공무원법 조항 원용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1994년 12월 31일부로 국가공무원의 조항도 "직위해제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경상대학교 당국도 직위해제를 중단하고 1995년 1월 4일부로 복직 조치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최대한 법원 판결을 미루는 등 지연작전을 써서 검찰의 명예가 덜 손상되도록 안간힘을 다했다. 1994. 11. 30. 기소된 후 6년이 지난 2000. 7. 24.에야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가 나왔는데, 1심 재판과정과 재판이 지연된 이유는 형식상으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유동렬이 계속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 이유로는 검찰이 신속하게 무죄판결이 날 경우 검찰의 명예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여 재판 지연작전을 사용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조기 무력화에 기여했다.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 기득권 세력 안보에 악용되고 있고,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률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다수 국민들도 인식하게 되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이용이 국가보안법의 위신을 저하시킨 것이다. 집필교수들이 몸으로 곤욕을 치루기는 했으나, 국가보안법의 효력 약화, 실질적 무력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로 적어도 학문의 세계에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 또한 당시 일각에서 추진되었던 「태백산맥」, 「천국의 계단」 등과 같은 문학작품에 대한 사법처리 시도는 중단되었다. 국보법 약화에 의한 표현의 자유 신장

은 한국영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국제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고 오늘날 드라마와 영화가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집필교수들의 활동을 위축시켰지만 동시에 진보적 연구의지와 진보정치활동도 자극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글을 쓰고 교내외 강의를 하는데 정신적 위축을 피할 수 없었다. 법적인 처리 가능성을 늘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같이 기소당한 사회학과 정진상 교수는 1994년 가을학기부터 인도 델리대학에 1년간 방문교수로 나갈 계획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무산되었고 아직도 해외로 나가지 못한 실정이다. 인도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유를 인도 교수에게 설명하기에 수치심과 비애감을 느낄 정도로 곤혹스러웠다고 한다. 동료교수인 경제학과 정성진 교수는 단행본 출판을 거의 마무리해놓고도 혹시나 사법처리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출판을 아직까지 못했다.

또한 해외에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1년짜리 단수여권만 발행해주어 자유로운 여행을 하지 못했다. 나는 2000년 여름부터 1년간 미국 메사추세츠대학에 방문교수로 갔는데 여권을 2004년 5월말까지만 끊어주어서 보스턴 영사관에 가서 기한을 3개월 연장해야 했다.

“시련은 인간을 강하게 만든다”

그러나 수구 보수 세력들의 부당한 공격에 직면하여 이에 대처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서 집필교수들은 내적으로는 연구자로서의 학문적 위치를 강화하고, 사회적으로는 진보적 정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

진보적 연구자들은 우선 개인적으로 양적, 질적으로 연구논문 쓰기를 확대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를 포함한 진보적 연구자들의 연구모임인 ‘진주사회과학연구회’(진사연)는 1989년에 시작되어 격주로 세미나를 가져왔으나 사건 이후 강화된 응집력을 바탕으로 매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구의욕이 더 커졌다. ‘진사연’은 15년 이상의 활동을 통해 2005년 4월 현재 270회 이상의 세미나를 누적하고 있으며, 현재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세미나 경비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진보적 연구자들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를 연구 중심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사회의 이해』 초판의 집필교수인 정성진 교수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소장으로 재직하였고, 2003년부터 정진상 교수가 원장(2001년 사회과학연구소가 연구원으로 명칭 변경)을 맡고 있다. 사회과학연구소는 2001년부터 사회과학연구총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제1권 『마르크스의 방법론과 가치론』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17권의 연구총서를 내었다. 그리고 1999년부터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선정을 지원하여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선정 탈락을 딛고 꾸준히 노력하여 2001년에 드디어 중점연구소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사회과학연구소는 중점연구소로 지정된 이후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노동문제와 노동조합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학술대회와 출판사업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연구소는 한국 진보사회과학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자임하여 2004년부터 전문학술지 『마르크스주의 연구』를 반년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교수들조차 국가보안법의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므로 노동자·학생·일반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제약은 더욱 크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줄이고 나아가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지탱하고 악용하는 보수 일색의 정치 및 이데올로기 지형이 보수와 진보의 병립구도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강화하는 길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 다수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교수들은 민주노동당 사업의 한 부분을 직접 담당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예컨대 필자는 1997년 국민승리21의 대통령 선거 공약 작성과 1999년 진보정당 준비위원회의 강령 제정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그리고 2000-2003년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으로, 2004년 10월부터는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장을 맡아 진보정당의 출범과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법학과 이창호 교수는 상당기간 민주노동당 진주지구당 정책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해왔다. 정진상 교수는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 교육 분야 핵심공약인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정책을 연구를 주도했고, 현재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노동당 참여교수들은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사회적 약자들인 노동자·농민·도시서민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도덕적 정당성을 넘어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5.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종결로 집필교수를 포함한 진보적 연구자들은 자본주의적 모순의 해결이라는 과제에 본격적으로 도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향후 과제로서 국가보안법은 실질적인 힘에서는 상당히 무력화되었으나 여전히 기독교 세력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위력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기독교세력이 국가보안법의 폐지 내지 근본적 개정 반대에 그렇게도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과제로서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자본주의적 모순에 대해서 본격적인 대결을 해나가야 한다. 외국자본의 진출 확대와 재벌과의 '긴장적 협력관계'의 형성으로 빈곤과 양극화,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 경제 불안정의 심화 등 자본주의적 모순이 급격히 심화되었다. 파시즘적 지배를 넘어서 이것보다 더욱 강한 자본주의적 지배가 한국 사회에 구축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해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에 불과하다. 이 걸림돌이 약해졌기 때문에 집필교수들은 진보적 연구자로서 자본주의적 모순의 해결을 목표로 삼아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민중적 입장과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방법을 견지하면서 그동안 크게 변화한 한국사회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이해』 교재를 알차게 개정함으로써, 수강학생들과 민중들이 한국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는 실천을 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진술자료

●
●
최갑수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과 민교협 그리고 국가보안법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벌어진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기억에 새롭다. 민교협 사무처장 일을 맡자마자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그 사건이 터져 1994년 8월 내내 서울, 진주, 창원, 부산 등지를 오가며 ‘공대위’를 꾸리고 서명 작업을 독려하고 항의방문을 조직하던 일이 여전히 기억에 생생한 것이다.

돌이켜 볼 때, ‘사건’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이른바 ‘김일성 조문’ 논란이 일었고, 특히 7월 18일에 당시 박홍 서강대 총장이 “일부 과격학생들이 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이른바 ‘신공안정국’이 조성되어 7월 29일에 대검찰청이 대학 내의 주사파를 전원 구속수사 하라는 지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민교협은 이런 사태 진전을 예의 주시하고 정확한 현실진단을 내리고 있었다. 민교협은 7월 26일에 발표한 ‘정부는 신공안정국 조성을 중지하고 개혁의 본령으로 복귀하라’는 제목의 창립7주년 기념성명에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 정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하”면서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신공안정국’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국내 정치정세가 현 정권의 생래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용으로 악용해오던 과거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운동, 농민운동과 야당세력을 탄압하려는 목적으로 남북관계를 경색시켜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의 발호가 최근 정세의 본질이다.”

공교롭게도 민교협이 성명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에 당국이 『한국사회의 이해』 등의 서적을 압수하는 일이 벌어지더니 급기야 8월 2~3일에 방송과 일간지는 그 책이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이적행위를 했기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대검의 발표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경찰은 곧 집필교수들에 대한 소환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를 대학교재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강의 내용 및 시험답안지에까지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단지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만이 아니

라 대학의 자율성, 더 나아가 학문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하여 민교협은 즉각 민변, 학단협 등 여러 지식인 단체들과 연대하여 8월 9일에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많은 대학과 단체에서 잇달아 경상대 교수들의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런 대응이 한 몫을 하여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8월 31일에 기각되었다.

의미심장하게도 '경상대사건'이 한창이던 8월 26일에 안기부가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그 간부들을 구속·수배하는 한편에 사민청 정치학교장인 유초하 교수에 대해 긴급구속장을 발부하여 검거에 나섰고, 10월 5일에는 정현백 교수가 안기부에 불법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에도 민교협은 적절하게 대처하여 유초하 교수는 직위해제처분이 해제되어 원상회복되었고, 정현백 교수는 방송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신청을 하여 정정보도 요청을 얻어내었다.

사실상 세 차례의 교수탄압사건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정세 속에서 일어난 동질적 성격의 것이었다. 그것은 이른바 '문민정부'의 개혁국면이 '3당 합당'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부딪혀 마무리되고 민민운동의 긴장력이 전반적으로 이완되는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 세 사건은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아니라 철폐가 반드시 일구어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새삼 일깨워주며, 역설적인 방식으로 국가보안법으로 표상되는 우리 현대사의 현실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웅변해준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다른 두 사건과 비교해 볼 때 더 본질적이며 그만큼 당사자들에게 더 많은 투쟁과 긴장력을 요구했다.

이는 '경상대사건'이 다른 두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공안정국의 희생자인 동시에 진주라는 지방도시의 토착세력의 공세로 말미암아 대학의 자율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측면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그야말로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접근로로 파악할 수 있는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경상대사건'은 당장에는 교수운동의 위기로 나타났지만, 민교협으로 보자면 자신의 존재이유를 확인시켜준 적극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민교협이 조직과 활동에서 일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런 진단은 주로 조직 내부에서 회원들의 결집력과 조직의 대중성이 약화되고 있음에 주목한 것이었다. 위기의 조짐은

1991년 상반기부터 나타났고, 특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두드러졌다. 거칠게 말해 그것은 교수대중조직으로 안주하고 싶어 하는 일반회원들과 교육과 사회의 더 많은 민주화를 위해 전국적 조직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집행부 사이의 작다고 할 수 없는 의견 차이로 나타나고 있었다. 바로 이럴 즈음에 일련의 교수탄압사건이 터졌고, 민교협은 그것에 비교적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신공안정국을 돌파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다. 다소간 느슨해 보였던 민교협의 지역회와 분회조직이 외부의 탄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만한 역량이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그것은 정말이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구체적 경험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우리에게 뼈아픈 과거가 아니라 공안세력의 공세를 막아낸 하나의 승리로 기록될 수 있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집필교수 여덟 분의 투철한 역사의식과 사명감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전공을 달리하는 교수들이 학문적으로 공동 작업을 하고 더 나아가 책의 이름에 걸맞게 그 공동 작업을 사회운동으로 승화시키는 하나의 전범을 이룩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사건'은 국가보안법, 민교협, 대학이라는 다양한 층위를 통해 한국사회의 여러 차원을 단면처럼 드러내준 살아있는 역사인 것이다.

